

# 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변동 및 산재은폐 제도 개선 건의

이상일 서울특별시회 회장



▲ 건설업종 동반성장 실무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건설업종 동반성장 실무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 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 △ 하도급 계약시 부당특약 설정 행위 근절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확보 △ 저가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근절대책 마련 △ 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 산재은폐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건설업체 최대 이슈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방안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설비업계를 대표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서울특별시회 회장이 건의한 '자재가격 인상에 따

른 물가변동 적용' 및 '산재은폐 제도개선'은 3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추진기로 협의했다.

이상일 회장은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설비공사의 주요 자재인 강관, 동관, 철판 등 강재류가 작년 연말 대비 30%이상 급등해 자재비 인상분만으로도 18% 정도의 추가공사원가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공공공사의 경우 특정자재가격 급등시 원재료의 가격변경에 따른 하도급을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지수조정을 적용으로 인해 일부만 반영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모든 비용을 떠안고 있어 설비업계의 경영악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실질적인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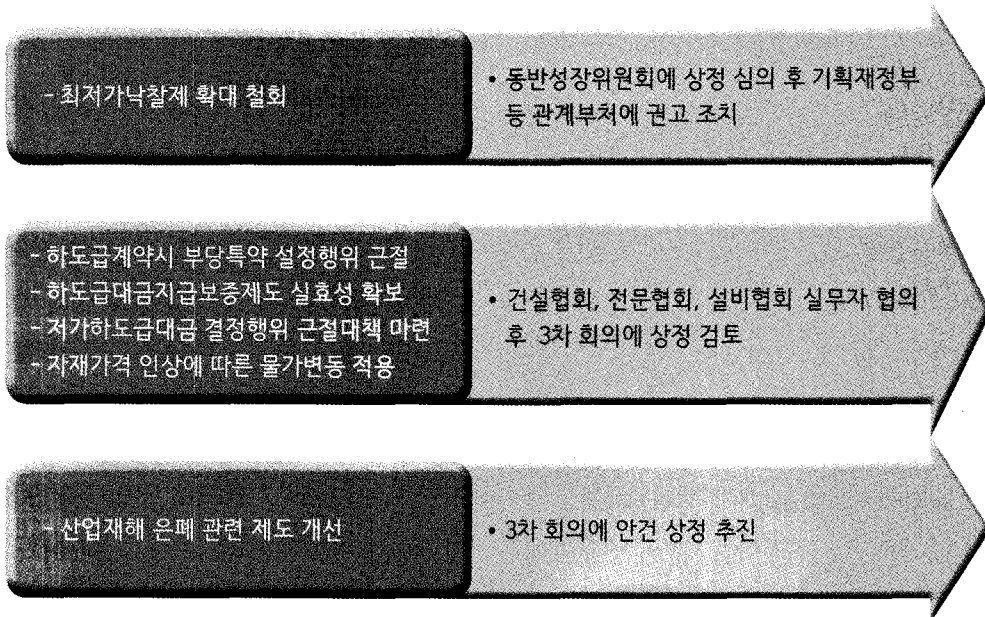
뤄지려면 가격 급등 자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신속한 물가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전문업체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일 회장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하도급 업체에게 산재은폐를 지시하고 공상처리를 강요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공공입찰 PQ 신인도평가에서 산업재해율 반영항목을 폐지하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4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경미한 산재는 재해율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 3월 16일 발족한 건설업종 동반성장 실무위원회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동반성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동반성장 정책 제안·우수사례 전파 및 업종별 동반성장 모델 개발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건설업종 동반성장 실무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및 산업재해 은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제2차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안건